

성명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박대조** / 담당: 농지연 정책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전화: 031-292-4911 팩스: 031-292-4912

법사위에 묶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해당 제도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법안임을 강조한다. -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농어촌 활성화를 돕는 제도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10개월째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1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기부를 원하는 본인이 특정 지자체를 정하고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자체에서는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유입, 출산율 증가 등 직·간접적으로 지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일본의 경우 고향세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첫째 납세총액 81억엔에서 2018년 기준 5천127억엔으로 10년간 63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임이 명백하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의 농·산·어촌이 사라지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국회는 정치적 논쟁과 여·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법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고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10일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